



제 1차 도시재생 광역합치포럼이 열린 18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 흔들기 중단”

송하진 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역할 올바른 자금운용 위한 대안 마련을”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국가균형발전역할에 힘써주시기를 호소한다”며, “논두렁분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희한한 표현을 지어가며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균형발전의 미래를 꺾는 일을 멈춰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공단과 자금운용분부를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시민행복 도시재생 머리 맞대다

제1차 도시재생 광역합치포럼 전주서 열려

구도심 재생 아시아문화심장터 등 사업 참석자 관심 집중
김승수 시장 “도시는 사람을 담은 그릇... 출발점 될 것”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관련 공기업, 연구기관,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광역합치포럼이 18일 전주에서 열렸다. 국내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광역합치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경웅 도시재생 합치포럼 상임대표 등 도시재생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와 광역·기초지자체장,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현장활동가, 공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도시활기를 되찾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모색하고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앞

로의 이 정책 추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5개 중앙부처, 전주시를 포함한 4개 기초단체 및 공기업, 연구기관, NGO 등이 참여, 협치를 통한 정책발굴을 위한 1차 도시재생 합치 세미나와 2차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 합치 세미나에서는 김영배 도시재생합치포럼 공동대표와 신혜란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 뉴딜과 도시재생합치포럼의 역할’, ‘도시재생 협치는 가능한가?’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구도심 재생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중

합경지장 중심 덕진권역 뮤지엄 벨리 조성, 팔복·승암새마을사업, 전통문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을 위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주역 첫마중길 조성사업 등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소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의 2부 진행으로 도시재생 협치를 위한 중앙·지자체·민간의 역할과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치를 위한 소통체계 구성과 정책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도시는 사람을 담은 그릇으로 도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도 달라진다”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준비하기 위해 전주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진정한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광역합치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발적 협력

과 협치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송효철 기자
호원대,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대학 선정
호원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한 ‘대형 교양 교육 컨설팅’에서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호원대에 따르면 교내 교양기초교육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컨설팅에 참여해 교양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은 물론, 학내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운영부터 학교의 교양 교육 의지까지 진단을 받았다.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교육목표의 재구성, 교육과정의 재편성, 교양 교육 운영체계 등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았고 그 진단결과를 100% 수용해 대학 교양기초교육 개선에 노력을 다했다. /김재훈 기자

동료 살해 시신 소각 유기 검찰,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하고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 사실은 모두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소유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류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12면 - 생생 인물, 백제 무왕 가능성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